



IPUS

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

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

- ▷ 보도일: 2011.9.19(월) ▷자료 배포 <http://tongil.snu.ac.kr>
- ▷ 문의: 02) 880-4052~4, tongil@snu.ac.kr
- ▷ 연구 책임: 박명규 원장 ▷보도자료 작성: 정은미 HK연구교수

<2011년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>

■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년에 비해 증가

- ‘통일이 필요하다’ 53.7%, 2010년 59.1%에 비해 5.4포인트 감소
- ‘통일에 관심없다’ 8.2%, 2010년 6.9%에 비해 1.3포인트 증가
- ‘통일 불가능하다’ 21.4%, 2010년 20.6%에 비해 0.8포인트 증가
- ‘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’ 50.8%, 2010년 53.5%에 비해 2.7포인트 감소

■ 연령별 40대는 통일 및 북한에 가장 호의적인 반면, 20대는 부정적.회의적 인식 뚜렷

-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수준 40대가 가장 높고(34.6%), 20대가 가장 낮음(22.9%)
- 통일 이후 사회문제(빈부격차, 부동산투기, 실업문제, 범죄문제 등)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 40대가 가장 높고, 20대가 가장 낮음
- 통일에 무관심한 응답자 20대가 가장 많고(10.8%), 40대가 가장 적음(5.7%)
- 북한을 ‘지원 및 협력대상’으로 보는 응답자 40대가 가장 많고(70.7%), 20대가 가장 적음(54.6%).
-반대로 ‘적대대상’으로 보는 응답자 20대가 가장 많고(26%), 40대가

가장 적음(11.3%)

- ‘대북지원 늘려야 한다’는 응답자 40대가 가장 많고(27.9%), 20대가 가장 적음(17.8%)

■ 천안함.연평도 사건 후 통일의식에 안보 위기감이 큰 영향 미침

-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‘남북한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’(27.2%)가 조사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치, 2010년 24.1%에 비해 3.1포인트 증가
 - 반면,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‘같은 민족이니까’(41.7%)는 2007년 이후 최저치
- 통일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중 ‘군사적 긴장해소’(83%)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
- 북한은 남한에 ‘적대대상’이라는 응답 16.7%, 2007년 이후 최고치, 2010년 12%에 비해 4.7포인트 증가
-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있다는 응답 78.2%, 2007년 이후 최고치, 2010년 67.4%에 비해 10.8포인트 증가

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

-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중 ‘중국’ 응답 크게 증가(2010년 24.5%→2011년 33.6%로 9.1포인트 증가)
 - 반면 ‘북한’은 크게 감소함(2010년 55.5%→2011년 46%로 9.5포인트 감소)
-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의 책임은 작년과 비교해 ‘중국’만이 유일하게 증가(2010년 59.4%→65.5%로 6.1포인트 증가)
- 최근 북한과 중국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‘우려스럽다’ 76.1%, ‘별로 상관없다’ 20.3%, ‘바람직하다’ 3.5%

■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양면적 태도(협력과 제재) 뚜렷

- ‘개성공단 유지되어야 한다’에 찬성 46.1%, 반대 20.1%, 반반 33.8%
- ‘금강산 관광 재개되어야 한다’에 찬성 61.4%, 반대 13.5%, 반반 25.1%

- ‘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’에 찬성 45.5%, 반대 23%, 반반 31.5%
- ‘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’에 찬성 63.8%, 반대 6%, 반반 30.1%

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, 신뢰도 모두 낮음

-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‘만족한다’ 40%, ‘불만족한다’ 60%
-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‘잘 반영하고 있다’ 30%, ‘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’ 70%
 -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와도 유사, ‘잘하고 있다’ 37%, ‘잘못하고 있다’ 63%
-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대하여 ‘신뢰한다’(33.6%)/‘반반’(30.1%)/ ‘신뢰하지 않는다’(35.2%) 로 나타나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

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‘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’이 최우선 과제, 반면 ‘통일재원 준비’는 가장 후순위

- ‘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’ 46.5%, ‘북한의 개방개혁 및 인권 신장’ 17.2%, ‘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’ 14.5%, ‘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’ 10.2%

○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, 2011년 통일의식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7월 26일~8월 15일(20일간) 동안 전국 16개시도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1,200명을 대상으로 1: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, 표본오차는 $\pm 2.8\%$, 신뢰수준은 95%임.

○ 2011년 통일의식조사의 전체 결과는 9월 21일(수) 오후1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발표될 예정임 《끝》

※ 참고: 행사프로그램 발표 및 토론자